

신향락 칼럼

벼랑 끝일수록 정도를 가야 하는데...



이사·주필

상수(常數)란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가진 수나 양을 이르는 수학용어다. 상수가 맞서는 변수(變數)는 어떤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할 수 있는 수이다. 상수와 변수가 전도되거나 잘못 해석되면 모든 체계가 어그러진다.

우리의 삶도,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상수와 변수를 분별하지 못하면 운수에 맡기게 될 뿐이다. 그리고 미래는 미지수가 된다.

전라도를 상징해 보자. 상수와 변수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분별할 필요가 있는지, 운수에 기대어도 되는지의 의미이다.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이다.

지역 낙후와 출대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상수다. 더욱 심각한 건 그로 인해 추락하는 변수다. 인구는 갈수록 줄고, 정부 예산은 편향된 데다 지역을 먹여 살릴 기업체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인사 소외는 고철화된 지 오래고, 지역 편견 또한 진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제 발등 찍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쳐다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오

히려 별거를 해야 할 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호남의 눈물' 그제 현주소다.

지금, 전라도 사람들은 우울하다. 호남권 인구와 유권자 수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충청권에 역전당하면서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이제 영·호남이 '영·충'이 될 처지다. 호남정치의 위축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호남의 눈물' 언제까지

전남은 지난 8월 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경북보다 4~5년 앞서는 비율이다. 지난해는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숫자가 신생아 수를 추월하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마저 발생했다. 1970년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한 명이었던 호남 지역 인구가 지금에 와서는 10명에 한 명 꼴로 전락한 것이다.

호남이 '아껴둔 땅'이 아니라 '버려진 땅'이라는 반증이다. 문제는 이게 위기의 전조라는 점이다.

사람이 많아야 지역이 활성화되고, 사람이 풀리려면 기업군(群)이 고루 지역에 산재해야 한다. 여수산업단지나 광양제철소가 대거 사람들을 빨아들인 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매출액 상위 전국 1000대 기업 가운데 광주·전남 기업은 25곳에 불과하다. 100대로 범위를 좁히면 아예 없다.

이 모두는 역대 정권의 지역 차별과 역사책이 주된 요인이다. 군사정권은 물론이고, 심지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조차 쓸만한 기업 하나 내려보내지 않았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 이후 호남은 인사든, 예산이든 뒷전에 지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 8개월은 더욱 암담했다. 인사는 그렇다 치고 내년도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마저 영남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5·18 왜곡과 호남 비하하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라도를 중북, 좌빨(좌익 빨갱이)로 묶어 쓰는 데도 주저함이 없다.

자성 통해 품격 높여야

호남은 지금 위기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건 오기와 체념이 아닌 품격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 품격은 원칙과 정비례한다. 기본이 돼먹지 않은 반칙은 지역 전체에 누를 끼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성(自省)할 필요가 있다.

사실 광주·전남은 '부끄러운 1위'의 연속이었다. 최근 쏟아진 국정감사 자료만 보더라도 지난해 전남도 비위 징계 공무원 전국 1위, 전남 교통사고 사망률 1위, 통학차량 어린이 부상 전국 최고, 안전띠 미착용률 전국 1위 등 후

진적 기록은 여전하다. 광주 역시 지난해 범죄 발생률 전국 1위, 성범죄 발생 전국 최다, 치안 성과 평가 전국 최하위 등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우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고질병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는 최근 3년 사이 교통사고 발생 전국 1위, 사망 및 음주사고 1위를 사실상 독점해 왔다.

우리는 흔히 5·18 정신인 민주와 인권, 나눔과 배려를 이야기한다. 이를 또 궁지로 여긴다. 그럼에도 이처럼 '불량'에 젖어 있다는 건 이윤배반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가진 것이 없고 힘들게 살다 보니 범죄와 사고가 많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원칙까지 무시한다면 지역의 미래는 없다. 안전사고든, 무질서든 그로 인한 피해자는 바로 지역민들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 품격을 높이자. 광주, 전라도 사람이 명품이 되면 지역은 자기발전된다. 기업과 사람들이 몰려올 수도 있다. 모두가 친절하며, 질서가 서 있다면 부러지지 않아도 오는 법이다.

용기를 내어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정권적 차별과 지역경쟁을 녹이는 일도 용기에 달려 있다. 상수를 변수로 바꾸고, 그 변수에 추진력을 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 상황이 복잡하고 벼랑 끝일수록 정도를 가야 하지 않겠는가.

社說

대통령 공약 무상보육 정부가 부담해야

20일 열린 광주·전남·북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누리과정)를 둘러싼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가 열점이 됐다고 한다. 국감 위원들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공감하면서도 효율적인 교육재정 집행과 전입금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질타한 반면 교육감들은 돈이 없어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내년 사업도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는 것이다.

이날 국감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이 정부와 예산문제를 협의해 해결하지 않고, 보육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은 맞지 않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또 광주시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이 수백억 원으로 전국 최고인데도 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 역시 같은 입장이다.

지방교육재정이 최악의 상황임에도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지난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교육정책협의회도 구성하

지 않거나 조례조차 만들지 않은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 위기는 돈의 문제다. 정부가 시도교육청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에 떠넘기면서 사태가 촉발된 것이다. 오죽했으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 거부를 선언했겠는가.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보육료 등 교육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2013년 300억 원의 정기예금을, 올해는 700억 원의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지난 3년간 777억 원의 정기예금을 해약했다. 전남은 이로 인한 손실만도 5460만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요인은 교육복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재정교부금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복지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사업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조차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업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공공도서관 책 훼손, 과연 문화시민 맞나

광주시내 도서관 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출자들이 책을 함부로 다루는 바람에 흉측한 모습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물상에 할당으로 내다 파는 책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 문화시민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지역 공공도서관은 무등도서관 등 시립 3곳, 중앙도서관 등 교육청 관할 5곳, 구립도서관 9곳 등 모두 17곳이다. 도서관 장서는 전체 216만8000권으로 이 가운데 지난해 시민들이 책을 빌려간 횟수는 306만8960차례에 이른다. 하지만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 시민들의 독서 매너는 한심하게 짝이 없다. 책에 커피, 라면 국물을 쏟아 열락을 묻히는 사례는 흔하게 볼 수 있다. 빌린 책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행방불명인 책이 비열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광경은 사치스럽고 흉측한 광경이다. 이에 책의 핵심 부분을 찢어가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서 무용지불인 케이스도 있다. 자칫 교재 등 실용서의 훼손은 더

심하다. 대출한 뒤 시험 시기 때까지 돌려주지 않고 개인 참고서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도서관 관계자는 하소연한다. 수험서를 빌려가 문제를 풀어버리는 바람에 다른 이에게는 소용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도서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론서 위주로 구입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니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망가졌더라도 읽을 수 있는 책은 작은 도서관이나 각종 시설 등에 기증되지만 누더기가 된 책은 '고물' 신세가 돼 kg당 100원 정도로 팔려나간다고 한다. 중앙도서관은 지난 5월 폐기 대상 도서 6063권(3710kg)을 재향군인회에 넘겼다.

책은 시민의 문화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다. 시립량도 중요하지만 도서관 자료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 또한 시민들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다. 책을 가까이하는 계절, 문화의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기고



전 홍 범 광주지방보훈청장

청렴으로 말하는 공직자의 자세

다.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 저술하고 있는 목민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청렴이다. 목민심서에는 '청렴할 림(廉)자가 수 없이 등장한다. 다산은 청렴이아말로 공직자의 본래 직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며, 청렴하지 않고서는 공직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청렴한 공직자만이 투명한 행정을 펼 수 있고, 청렴해야만 공직자의 권위가 서며, 청렴해야만 공직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스컴을 통해 매일같이 쏟아지는 사건사고에 부정부패 기사가 끊이지 않는다. 모 공무원의 공공행령 사건을 비롯해, 정치인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고위 공직자의 뇌물수수, 모 기업의 납품비리 등 계속되고 있는 부정부패는 우리사회가 만성적 부패에 허우적 거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채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를 보면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여 지난 2013년 55점(세계46위, OECD 34개국 중 27위)을 나타낸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현주소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경제규모가 세계 15위에 달하고,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들었으며, 세계적인 한류열풍과 UN평가 전자정부 3년 연속 세계 1위라는 국격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수치이다.

그럼 과연 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부정부패를 추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공직자의 청렴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것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청렴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정직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채용과정에서부터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둘째로 청렴은 실천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하며,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청렴은 늘 듣기 좋은 구호나 선언적 강조에 그쳐서는 안 되고,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실천하는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 '이런 것 까지도...' 라는 말이 이상할 정도로 사소

한 것에서부터 원칙과 기본을 지켜야 된다.

광주지방보훈청에는 위 제언에 대한 실천을 위해 실제 근무 중 지인이나 특정인의 청탁 및 금품 향응 수수는 일절 삼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친절하고 성실한 민원응대로 우리 사회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반부패 청렴데이'를 지정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상기시키고 민원대에는 '보훈공직자 청탁배격 안내문'을 비치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3.0의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활동의 하나로 보훈급여금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 하에 직원들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청렴은 끊임없는 노력이며, 공직자는 청렴으로 말해야 한다. 힘되고 어려울 때 중단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지만, 꾸준히 실천하고 노력하는 자기관리를 통해 청렴이 자연스럽게 사회전반에 정착될 것이라 믿고, 원칙과 정직이 통하는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 질 때 청렴 대한민국의 국격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기고



최 훈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민선 6기 호남권 상생도약을 기대한다

이렇듯, 호남은 예로부터 풍부한 자원, 융성한 문화예술로 당대 사회경제 발전의 근간이 된 고장이며, 변변히 이어온 충의와 희생정신으로 국난을 극복해 내고 동학혁명 등 민주주의의 심장으로, 의(義)의 고장으로 존중받으며 시대의 정신을 선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때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1960년대 경부축을 중심으로 국가발전정책이 지속되면서 호남권 경제발전은 서서히 약화되었고 현재 더욱 열악한 상황이 처해있다. 그래서 오랜 역사를 함께해 온 호남의 전통과 문화적 동질성을 지키고 공동번영과 상생발전을 위해 2004년 12월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최초 모임을 갖고 호남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 시·도가 윤번제로 2008년까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간 호남고속철도 조기건설, 미래첨단산업 낙후지역 우선배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중단 등 3회에 걸쳐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호남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함께 노력해 오고 있지만, 민선4기 들어 3개 시·도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선6기 출범을 맞아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그 첫 만남을 전북 순창에서 개최하였다.

6년 만에 재개된 '호남권 정책협의회'에

서는 앞으로 활발한 만남을 통하여 호남권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는 '국민통합을 선도하는 협의체'로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협의회가 호남권 현안사업 뿐만 아니라 3개 시·도의 의의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만들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5일 정책협의회에서 3개 시·도지사는 문화교류, 인적교류 등을 통하여 '호남의 정신'을 모아 가는 공동분포를 찾는데 합의하였다.

특히 민선 6기 전북도정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토탈관광시스템'은 호남광역권 벨트와 제안으로 큰 원군을 만난 셈이다. '전주 한옥마을~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 등 호남권 광역관광벨트와 사업으로 서울, 부산, 제주 등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분산시키고 호남권으로 유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호남권의 연대는 전주세계소리축제기간 중 운영한 광주시장의 깜짝 방문으로 의미를 더하였다.

앞으로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갔으면 한다.

첫째,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이다. 통상 영·호남 교류는 문화뿐만 아니라 각종 직능단체들도 매년 오가며 교류를 하고 있지만, 정작 호남간 교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동·서간 교류도 중요하지만 호남권 인적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우선 지

역향우회를 통한 인적교류도 있고,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의 교류, 그리고 나아가 민간문화예술단의 상호교류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공동선을 위해 한발씩 양보하자.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6년간 중단되었던 것도 지역만을 생각하는 닫힌 사고에서 나왔다고 본다. 따라서 호남권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비록 당장은 지역별로 잃는 것이 있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호남권이 공동 발전한다면 양보하고 협조하는 실행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미래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이다. 1차 산업이 주류를 이뤘던 시절에는 우리 호남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산업이 다변화하고 2·3차 산업이 사회전반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 호남만이 할 수 있는 전략산업 연구개발 선점함으로써 타 지역보다 미래선도산업에 우위를 점하여야겠다. 호남권내 탄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기지화 등 미래전략산업의 발굴과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6년 만에 재가동 된 만큼 호남권 3개 시·도가 한 뜻으로 한 몸이 되어 지역 내 상생발전과 우리나라 발전 속의 한 분류로서 제 몫을 해내리라 기대한다.

無 等 鼓

마쓰오카 도시카쓰는 일본에서 전후 첫 번째로 자살한 현직 장관이다. 농림수산상이었던 그는 2007년 5월 28일, 의원회관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정치권의 퇴진 압박에 시달렸으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에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일본에서는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자살을 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임기 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국회 의원이 10여 명에 이르고, 파산하거나 부정을 저지른 기업가들이 자살로 임직업과 사회의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976년 록히드 뇌물사건 때는 다나카 기쿠에이 총리의 비서 겸 운전사가 '주군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검찰 수사 중 자살하기도 했다.

자살을 가장 큰 범죄로 치는 서양과는 달리 일본에서 이처럼 정치인과 기업인의 자살이 빈번한 데는, 자신의 명예와 조직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높기 때문이라는 문화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자살한 뒤에는 그 책임을 묻지 않아 온 문화도 그 배경으로 꼽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살을 범죄시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최근 들어 '책임을 진다'며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때 수학여행을 추진했던 단원고 교감이 "혼자 살기에는 힘이 버겁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또 최근엔 판교 환풍구 추락 참사 때 행사 실무 과장이 "동료에게 미안하고 사교로 죽은 이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는 글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자살은 해결책이 아니다. 극단적인 방법이 고개를 찌는 것이 일반의 정서이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목숨을 걸고 사화한 그들의 진정성엔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불법·부정을 저지르고도 웃으며 살아가는 정치인·기업인들이 적지 않다. 교감선생님과 실무담당자의 목숨을 건 사화가 양심 불감증에 걸린 우리 사회 지도층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

/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

책임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